

# 여야, 박원순 추모 '한목소리'

### 민주 "민주화에 앞장 서... 서울시정 공백 없도록 할 것" 정의 "당혹스럽고 황망" ... 열린 "천만 촛불광장 지킨 분"

여야는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다. 서울시장을 맡으신 후 서울 시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황망한 심정이다.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고인의 큰 책임이었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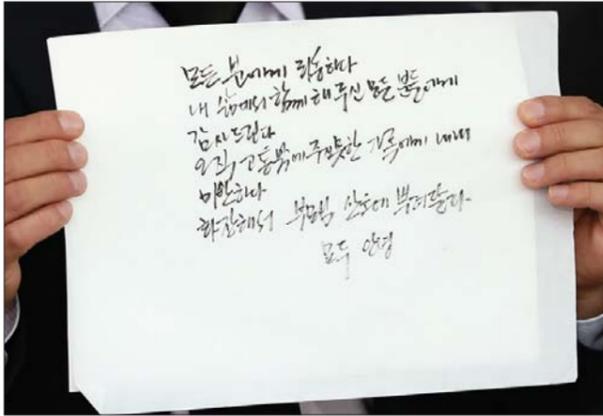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산 인근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한 일"이라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비통한 마음뿐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에 열린민주당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으로 헌신해오신 나날들을 기억하겠다"며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야권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치러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며 "잡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다.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

###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10일 국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권력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300만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심리되는 동안 대법원은 지난날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

##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까지 인상... 첫 주택 취득세 감면

###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발표

#### 투기목적 수요 세 부담 주고 실수요는 혜택 늘려

1년내 양도시 세율 70%, 2년 미만 보유분은 60%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1.5억~4억은 50%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신혼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린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기존 40%에서 70%로 대폭 인상한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나 투기목적 주택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치솟는 집값이 잡히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은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보유 범위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범위의 경우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한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한 것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리겠다. 이에 따

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반대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확실한 차별성을

뒤 각종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30대 등의 간절히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기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

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 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낮췄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희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를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뉴스

##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kr